- 2019년 5월 민주주의 서울 -

<시민토론의제선정> 기획단 회의록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19. 5. 27.(월) 14:30 ~ 17:00

□ 장　　소 : 서울NPO지원센터 2층 받다

□ 참 석 자 : 7명

□ 시민토론 대상 의제 검토 및 기획

○ 서울시는 패션계 표절 분쟁에 대한 공적인 중재 및 자문 기관 도입

○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지켜 주세요

○ 헬리오시티 버스 노선 신설

Ⅱ 회 의 진 행

□ 4월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 선정 경과 안내

□ 5월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대상 의제 소개

□ 5월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 검토 및 기획

□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 선정 기준 논의

□ 회의 종료 및 다음 회의 안내

Ⅲ 회 의 결 과

□ 서울시는 패션계 표절 분쟁에 대한 공적인 중재 및 자문 기관 도입

〈회의 요약〉

○ 이 사안은 전문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이 분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

○ 다만, 이 분야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에게 논의의 장을 만들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그 결과

① 패션계 디자인 보호 방안 정책 간담회(관계자 중심)

② 패션계 디자인 모방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토론(일반시민 중심)

○ 이후,'19. 6. 21. 민주주의 서울〈시민토론의제선정〉선정단에서 2가지 주제를 숙의와 투표를 통해 최종 의제 결정

○ B : 시민 제안에 대한 부서 답변은 "패션엔젤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걸 공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할지, 그래도 포괄적으로 의논할 수 있을지 고민임.

○ K : 이 제안 자체로는 토론이 어려운 상황임. 작게는 패션, 크게는 문화예술계 전반의 표절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논의해야 할 것 같음.

○ J : 개별 기업 간의 문제로 보기에는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들의 어려움이 느껴지는 제안이었음. 공론화 할 경우 대기업에 대한 여론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에도 공감이 됨. 소상공인들 간의 협의구조나 민주주의 서울만이 아니라 다른 공론장에서 이런 문제의 구조적 사안을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음.

○ G : DDP가 이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해 5년쯤 지났음.

당시 영세한 봉제산업 분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인큐베이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큰 관심을 받았음. 그러나 관심이 줄어드는 시기에 다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음. 이 문제를 직접 다루기가 어렵다면, 영세업자들의 디자인 도용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음.

○ K : 모방, 표절 등 지적재산권이나 특허 관련 사안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변리사가 따로 있지 않나. 국제법 등에 이미 제도적 틀이 있음.
제안 관련 기사를 보면 한개 스타트업 입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워 보임.
시민토론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시민들과 이야기해보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표절 문제가 있다면 불매운동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 H : 전문적인 분야이고 전문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일이니, 당사자들에 국한해 토론을 열면 좋겠음.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지적재산권, 디자인 관련 분쟁을 의제화 할 필요가 있음.

○ B : 공론화하기 어려운 의제라고 봄.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뚜렷한 경우에 타협이나 양보가 안 됨. 소송이 해결 방안이 되는 이유임. 법대로 한다면 공론화할 부분이 없지 않나. 토론을 통해 이 문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없을 것임.
분쟁 발생 시 관련 기관이 자문이나 조정 등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토론으로 공론화한다면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음. 만약 공론화를 한다면 패션 생태계 안에서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야하고,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한다면 영세상인 보호방안과 관련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구하는 차원에서 가능함.

○ G : 공론화가 꼭 어떤 답을 내려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봄. 다만 이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영세업자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실태조사가 먼저 필요해보임. 이 집단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면에서 보호받아야 하는지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뚜렷하지 않음.

○ Y : 제안을 보았을 때 어느 쪽이 옳다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움. 500명이 공감을 표시했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함. 양측 기업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느끼고 있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가 된 것이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 서울의 역할이라고 봄.
문제의 당사자들이 존재하니 자기 사례를 통해서 해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음. 그 기회를 토론형 혹은 아이디어 취합형의 공론장을 통해 마련하는 게 민주주의 서울에 부합한다고 봄. 현재 법제도의 미비점이 있으니, 미비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함. 대기업이 피해자일 수도 있음.

○ Y : 혁신창업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볼 수도 있음. 미국이 지적재산권 보호가 잘 되는 점은 창작자가 권리를 보호받고 그걸 인정받기 때문. 우리는 새로운 걸 만들어도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 우리나라도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적용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봄. 지적재산권 문제를 확장해서 다뤄볼 수 있을 텐데 서울시가 다루기에는 큰 주제일 수 있음.

○ B : 공론화의 한 형태 중에 장기적으로 의견을 받고 정책을 숙성시키는 방법도 있음. 한국의 패션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에 대한 전망 속에서 패션산업 영세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다양한 제안을 하고 제도화해야함.

○ K : 시민토론하고, 동대문 지역과 담당 공무원 서울시가 함께 정책토론회를 해보는 방안은 어떤가.

○ B : 영세패션업자들을 돕고 한국 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방안이 좋은가, 3개월 정도에 걸쳐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 어떤가. 1안은 대기업의 상표권침해 대응방안, 2안은 영세업자간의 모방 문제, 3안은 영세업자가 대기업을 카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시민 토론, 전문가 토론을 거치며 장기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에 제기하는 과정이 되면 좋겠음.

○ K : 하나를 하더라도 실행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하면 좋겠음. 지적재산권 자체를 이해해야하는 의제. 세밀한 것은 이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서 기획되어야 할 것임.

○ M : 당사자 중심의 논의를 할 것인지 시민들과 같이 할 것인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음.

○ Y :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토론이 현행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에서도 패션엔젤과 같은 사업의 한계가 뭔지 제시할 수 있음.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이면 좋겠음.

○ G : 패션엔젤을 가지고 토론해도 마찬가지임. 현재까지 지원 정책이 변호사비 지원 정도임. 이런 지원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런 이야기까지 한다면 토론이 어려워질 것임. 분명한 것은 공론화의 본래 취지대로 다양한 시민이 참석하고 그 안에 전문가가 들어가야함.

○ K : 사안의 특성상 숙의가 필요함. 그리고 특허제도의 존재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쟁점이 있는 상황임. 토론 주제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하면 시민들의 토론이 어려움. 교육이 선행되어야함.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안을 제시해서 시행하는 게 적절할 것임.

○ G : 그런 방향이라면 공론화 한다 안한다로 나누고 공론화 방향 중 핵심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투표하면 됨. 그리고 모든 지식 재산권을 다루는 것은 1년 동안 다뤄도 힘들 것이고, 패션만 다룬다면 다룰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토론을 진행하면 좋겠음.

□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지켜 주세요

〈회의 요약〉

○ 이 사안은 해당 지역 구청, 관계 기관,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제도적 절차와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

○ B : 갈산공원은 다른 문제이다. 기존에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막으면 더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정밀하게 예상해본 다음에 공론화 여부를 가리는 것이 좋음. 서울시가 다루기보다 구청과 경찰청에서 기존 절차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

○ Y : 갈산공원은 고민이 됨. 어쨌든 일부 입주자들은 분양 당시에 차량이 다니지 않을 거라고 알고 왔음. 일부 주민들은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몰랐을 것 같음. 만약에 공론화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든지 이런 개선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음.

○ G : 갈산공원 근처의 이 도로가 큰 차도가 아님. 주변 지역 거주자들 중 불편한 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양천구 주민 전체나 서울시민 모두가 논의할 필요는 없어 보임.

○ Y : 주민의견이 더 고려되어야하다는 취지임. 교통영향평가 등에 있어서 앞으로는 주민의견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것을 주제로 토론해보면 어떻겠나.

○ S : 저는 공론화한다면 교통보다는 공원 관련 의제라고 봄. 공원이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공원이라면 차가 다니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음. 공론화 의제로 만든다면, 공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공적 가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할 것임.

○ K : 공원의 기능과 역할을 이야기한다면, 공원의 핵심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라고 보는데 차도를 막으면 특정 단지의 뒷동산이 되는 건 아닌가. 차도를 없애면 공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될 것.

□ 헬리오시티 버스노선 신설

〈회의 요약〉

○ 신속한 행정 처리를 요청하는 제안으로 기존의 서울시 버스노선 조정 절차에 따라 대응할 사안으로 판단

○ K : 버스 노선 신설은 데이터를 근거로 함. 특정 지역 간의 이동량이 많아지면 노선을 만들고 하게 된다고 알고 있다. 준공영제이니 노선을 늘리자면 세금이 늘어남. 데이터를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할 사안임.

○ B : 헬리오시티는 공론화할 건은 아닌 것 같음. 서울시에서 신속하게 예측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신설이나 폐지를 하면 됨.

○ J : 이 사안을 공론화하지 않는 데에는 동의함. 다만 서울시 버스 노선 결정이 단순히 다수의 이용객 수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함. 공공서비스라면 수가 적더라도 필요에 따라 만들 수 있을 것.

○ G : 헬리오시티의 경우, 서울시에서 버스노선 조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절차나 방법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더 잘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음. 공론화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서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음.

○ B : 문제는 당장 시급하게 해달라는 것임. 이용객이 많으면 빨리 해주는 것도 방안임.

○ K : 시급하다는 요청이 있다고 기존의 절차를 무시하고 노선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함.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